

#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별 격차는 지속되는가

김 해 원\*

## I. 서론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최근 지역노동시장 및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10년간 지속되어 서서히 뿌리 내려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동 제도를 통해 형성된 지역민의 지역정치 참여욕구의 증대, 지역발전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과 함께 지방재정운용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각 방면의 정책집행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노동시장 정책과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책집행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다면 이 분야는 지역정책의 주요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및 인적자원 현황에 근거한 지역 고용문제에 대한 맞춤형방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에 특화된 노동시장 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sup>1)</sup>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별 격차를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일자리 순증가량의 지역간 차이 배후에 존재하는 일자리창출과 소멸, 노동자의 채용과 이직의 지역간 차이가 어떠한지를 검토한다. 둘째, 실업률과 고용률의 지역별 격차가 장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지역별 격차에 대응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1) 정인수·전병유·임상훈(2003), 반정호(2005), 박진희(2005) 등을 참조.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에 대해 검토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별 격차를 분석함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노동시장 정책입안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노동시장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본 분석은 다양한 성격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성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이 하나의 일관된 지역노동시장 상을 제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제Ⅱ장과 제Ⅳ장은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고용보험DB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제Ⅲ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 Ⅱ. 고용성과의 지역별 차이

### 1.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지역별 차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고용보험DB 원자료를 분석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순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진 도 단위 지역은 충남, 경기 지역이며 순일자리 증가가 낮은 지역은 충북, 전북 지역이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 대전이 순일자리 창출이 활발했던데 비해 부산, 대구 지역은 일자리 순증가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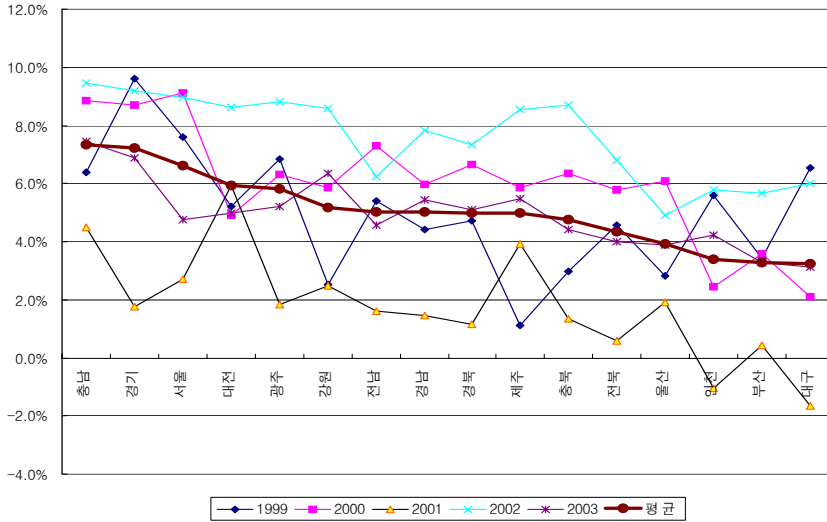
<표 1>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별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 그리고 일자리재배치율 등의 평균값을 지역별로 요약한 것이다.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경우 일자리창출률이 높는데 비해 경남, 전남 지역의 일자리창출률이 낮다. 광역시 단위 지역의 경우 광주, 서울이 높는데 비해서 울산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일자리소멸률은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강원, 충북이 높게 나타나고 광역시 지역은 인천이 높게 나타난다. 일자리재배치율은 강원과 인천이 각각 가장 높다.

일자리창출과 소멸에 대한 김혜원(2004)의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순일자리증가율이

2) 같은 시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순일자리증가로 측정된 고용성과 순위와 고용보험DB의 고용성과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학적인 의미에서 모든 산업, 모든 규모의 사업체, 모든 종사상 지위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보험DB는 공공부문, 5인 미만의 종사자를 갖는 사업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지위의 근로자 등이 빠져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DB를 분석한 제Ⅱ장과 제Ⅳ장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good job)의 창출과 소멸, 이 일자리를 둘러싼 채용과 이직의 흐름에 대한 제한적 정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증가하는 호황기에 일자리창출률은 높아지고 소멸률은 낮아지며, 순일자리증가율이 낮아지는 경기불황기에는 일자리창출률은 낮아지고 소멸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의 시계열 특성은 지역별 횡단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 순일자리증가율의 지역간 차이



자료: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1〉 일자리변동률의 지역별 차이

	jgr	jcr	(창업)	(확장)	jdr	(폐업)	(축소)	jrr	jer
서울	0.066	0.164	0.056	0.108	0.098	0.024	0.074	0.262	0.196
부산	0.033	0.151	0.066	0.085	0.118	0.039	0.079	0.268	0.235
대구	0.032	0.149	0.064	0.085	0.117	0.037	0.080	0.266	0.227
광주	0.058	0.169	0.080	0.089	0.111	0.037	0.074	0.281	0.223
인천	0.034	0.161	0.071	0.090	0.127	0.036	0.091	0.287	0.249
대전	0.059	0.164	0.074	0.090	0.104	0.033	0.071	0.268	0.209
울산	0.039	0.123	0.059	0.065	0.084	0.026	0.058	0.207	0.168
경기	0.072	0.176	0.072	0.104	0.104	0.030	0.074	0.280	0.207
강원	0.052	0.175	0.085	0.090	0.123	0.047	0.077	0.298	0.246
충북	0.047	0.169	0.072	0.096	0.121	0.036	0.085	0.290	0.243
충남	0.073	0.173	0.070	0.102	0.099	0.030	0.070	0.272	0.198
전북	0.043	0.158	0.076	0.082	0.114	0.038	0.076	0.272	0.228
전남	0.050	0.159	0.072	0.087	0.109	0.032	0.077	0.268	0.217
경북	0.050	0.156	0.064	0.092	0.106	0.031	0.075	0.261	0.211
경남	0.050	0.153	0.066	0.087	0.103	0.032	0.071	0.255	0.205
제주	0.050	0.167	0.079	0.088	0.117	0.042	0.075	0.284	0.234

주: jgr은 순일자리증가율, jcr은 일자리창출률, jdr은 일자리소멸률, jrr은 일자리재배치율, jer은 초과일자리변동률임. 자세한 정의는 전병유·김혜원(200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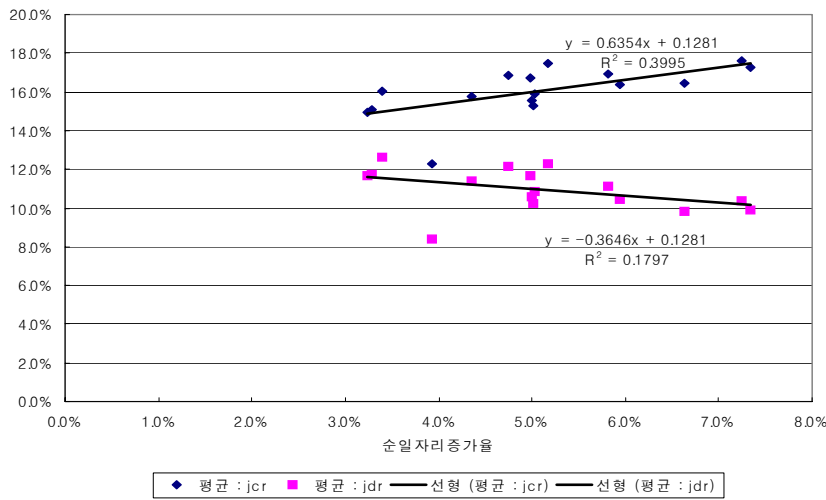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DB 원자료.

[그림 2]는 가로축에 지역별 순일자리증가율을, 세로축에 지역별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을 보이고 있다. 각 자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지역별 평균값이며 16개 시도 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순일자리증가율과 일자리창출률의 점산도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일자리증가율과 일자리소멸률의 점산도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지역에서는 일자리창출률이 높아지고 소멸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창출과 소멸 양자 모두 고용사정 호전에 기여한다. 반대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지역에서는 일자리창출률이 낮아지고 소멸률은 높아진다.

전병유(2003)는 지역별 순일자리증가율과 일자리창출, 소멸률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지역별 순일자리증가는 일자리창출이 주도함을 밝힌 바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 역시 전병유(2003)와 일치한다. 최근 5년간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순일자리증가가 1%p 늘어 날 때 창출률은 0.63%p로 증가하는데 비해 소멸률은 0.36%p 감소한다. 지역의 일자리 순증가는 소멸률이 크게 감소하기보다는 창출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일자리소멸보다 일자리창출이 지역의 일자리 순증가를 주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창업과 폐업을 제외하고 지속사업체만의 일자리창출, 소멸을 순일자리증 가에 대해 그린 것이다.<sup>3)</sup>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창출률은 순일자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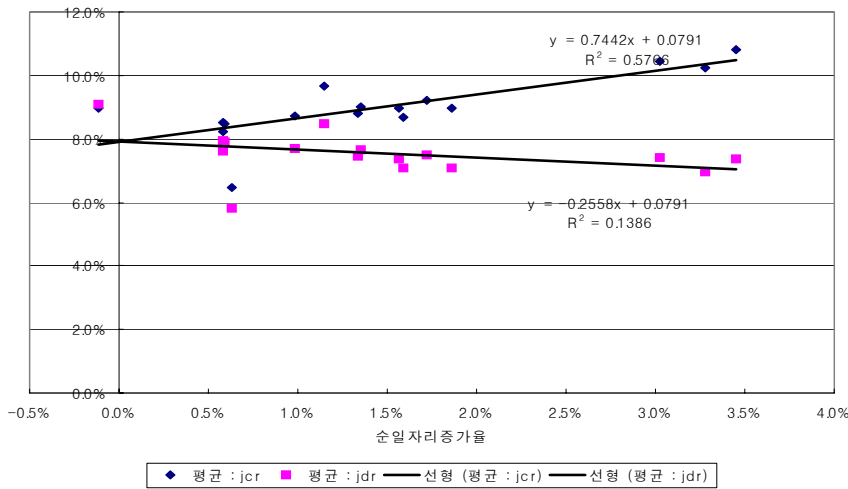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사업체의 일자리창출과 소멸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3)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의 분모는 지속사업체뿐만 아니라 창업, 폐업 사업체의 일자리 수를 모두 감안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전체 사업체의 일자리변동률과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림 3]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과 소멸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1%p 증가에 대해 0.75%p 증가하지만 일자리소멸률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이 순일자리증가율에 반응하는 정도가 전체 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의 반응 정도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지역별 일자리창출은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보다는 지속사업체의 확장으로 야기된 고용창출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소멸률이 순일자리증가율에 반응하는 정도는 전체 사업체의 반응 정도에 비해 작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소멸은 지속사업체의 고용 축소보다는 폐업하는 사업체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지역별 채용과 이직 흐름

채용률은 평균 노동자수 대비 1년 기간 사이에 새로 사업체에 채용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직률은 평균 노동자수 대비 1년 사이에 사업체를 떠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이 사업체 수준에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을 측정한다면, 채용률과 이직률은 사업체 수준에서 노동자의 이동을 측정한다. 채용과 이직을 유발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며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노동자의 이동은 발생한다. <표 2>는 채용률과 이직률 등 노동자재배치율의 지역별 차이를 고용보험DB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순일자리증가율에 대해 지역별 채용률과 이직률을 점산도로 도시한 [그림 4]에서 보듯이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일수록 채용률은 높고 이직률은 낮다. 고용사정이 악

화되는 지역일수록 채용률은 낮고 이직률은 높다. 이와 같은 채용률과 이직률의 패턴이 의미하는 바는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의 경우 채용률도 높고 이직률도 높거나 채용률도 낮고 이직률도 낮으면서 채용률과 이직률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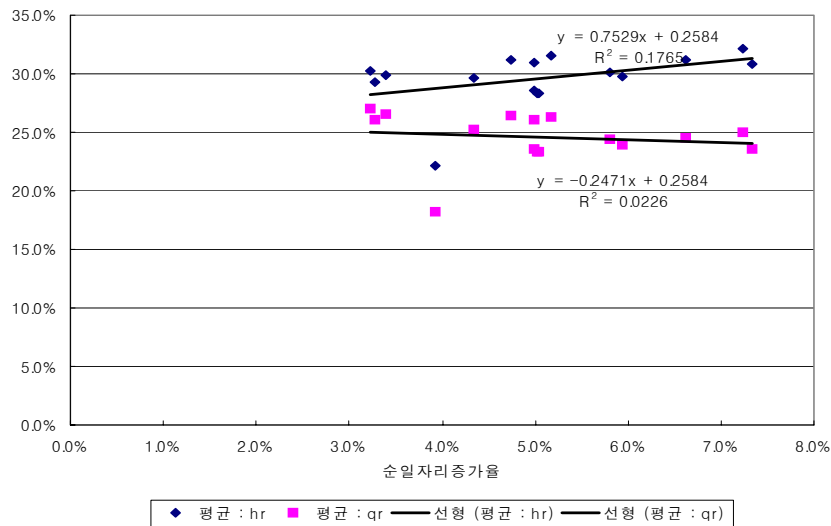
〈표 2〉 노동자재배치율의 지역별 차이(1999~2003 평균)

	hr	qr	wrr	cfr	jrr/wrr	jcr/hr	jdr/qr
서울	0.312	0.246	0.558	0.295	0.470	0.527	0.399
부산	0.293	0.260	0.553	0.285	0.485	0.514	0.452
대구	0.302	0.270	0.572	0.306	0.466	0.494	0.434
광주	0.302	0.244	0.545	0.265	0.515	0.561	0.457
인천	0.299	0.265	0.564	0.277	0.509	0.537	0.477
대전	0.298	0.239	0.537	0.269	0.499	0.549	0.437
울산	0.221	0.182	0.403	0.196	0.514	0.557	0.461
경기	0.322	0.249	0.571	0.291	0.490	0.547	0.416
강원	0.315	0.263	0.578	0.280	0.515	0.555	0.468
충북	0.312	0.265	0.577	0.287	0.503	0.541	0.458
충남	0.309	0.235	0.544	0.273	0.499	0.559	0.421
전북	0.296	0.253	0.549	0.277	0.495	0.532	0.452
전남	0.284	0.234	0.518	0.250	0.517	0.560	0.465
경북	0.285	0.236	0.521	0.260	0.502	0.545	0.449
경남	0.284	0.233	0.517	0.261	0.494	0.539	0.440
제주	0.310	0.260	0.570	0.286	0.498	0.538	0.450

주 : hr은 채용률, qr은 이직률, wrr은 총노동자재배치율, cfr은 초과노동이동률임. 자세한 정의는 전병유·김혜원(200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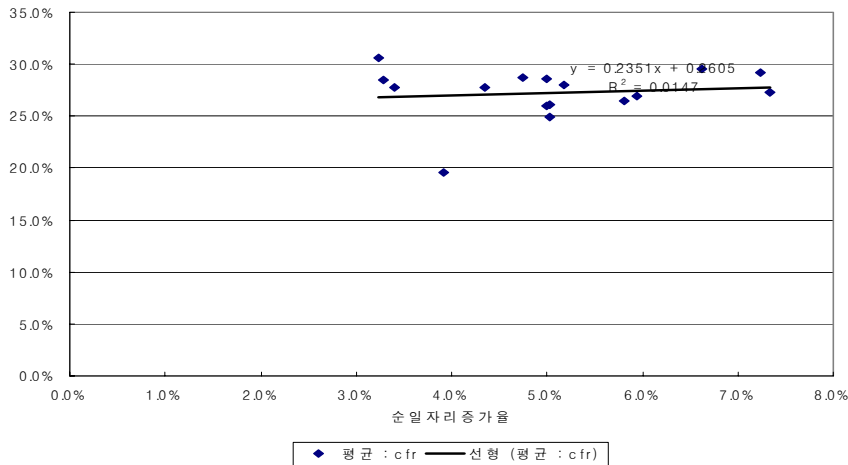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그림 4〉 순일자리증가율과 지역별 채용률과 이직률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그림 5] 순일자리증가율과 초과노동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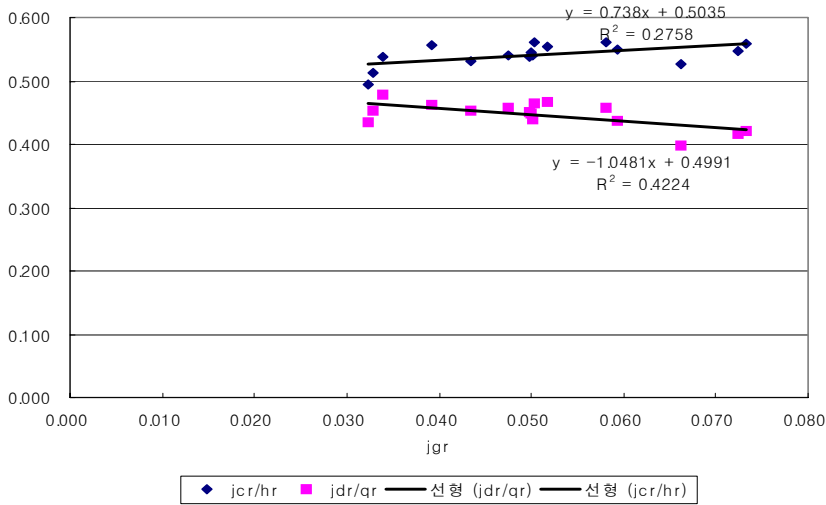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Bockerman et. al.(2001)에 의한 핀란드의 지역노동시장 연구에 따르면 고용사정이 나쁜 지역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이 줄면서 초과노동이동률은 낮고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은 초과노동이동률이 높다. [그림 5]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고용보험DB를 이용해 계산한 한국의 순일자리증가율과 초과노동이동률의 점산도이다. 순일자리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초과이동률이 높아지는 특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순일자리증가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초과이동률이 낮아지는 특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Bockerman et al.(2001)이 주장한 지역의 고용사정과 지역내 자발적 노동자 이동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 가설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자발적 노동자 이동과 고용사정의 관계는 초과노동이동률의 차이에 의해서만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 노동자 이동은 노동자 채용과 일자리창출의 차이, 노동자 이직과 일자리소멸의 차이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순일자리증가율과 채용 중 창출비중과 이직 중 소멸비중을 점산도로 그린 [그림 6]에서 보듯이 순일자리증가율과 창출비중은 양의 상관관계를, 순일자리증가율과 소멸비중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일수록, 이직 중에서 일자리소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채용 중에서 일자리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에서는 비자발적인 이직보다는 자발적인 이직이 많으며 채용의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가 떠난 공석을 채우기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사정이 나쁜 지역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이 많으며 일자리창출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는 빈 공석을 채우는 채용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Bockerman et al.(2001)의 가설과 일치한다.

[그림 6] 순일자리증가율과 채용 중 일자리창출 비중 및 이직 중 일자리소멸 비중



자료: 고용보험DB 원자료.

### III.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성의 지속

#### 1. 지역별 실업률 격차의 지속성

Blanchard and Katz(1992)에 따르면 미국의 지역별 실업률에는 지속적인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업률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 및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장기적으로 볼 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가 활발하여 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장기적으로 사라진다. 이에 비해 미국의 지역별 일자리증가율의 차이는 지역별 노동수요 충격이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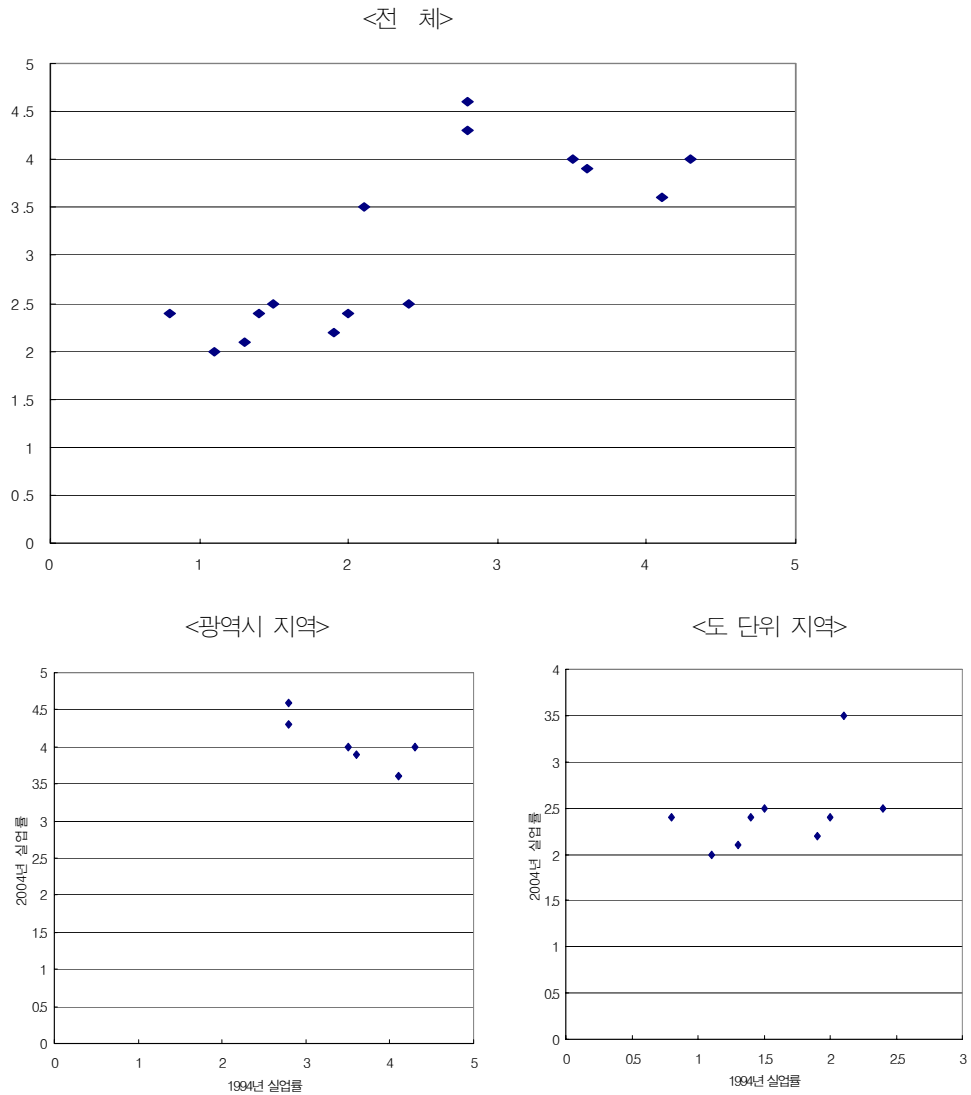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적 차이가 한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실업률 격차의 지속성을 살펴보자. 1994년 한국의 지역별 실업률과 2004년의 지역별 실업률을 비교한 [그림 7]에서 보듯이 1994년에 실업률이 높았던 지역은 2004년에도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실업률 격차의 지속성이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16개 시도를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의 실업률 변화에서 보듯이 대도시 지역은 구조적으로 도 단위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두 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대도시의 경우나 도 단위 지역의 경우나 모두 10년 전에 실업률이 높았다고 해서 지금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역별 실업률의 장기적인 지속적 격차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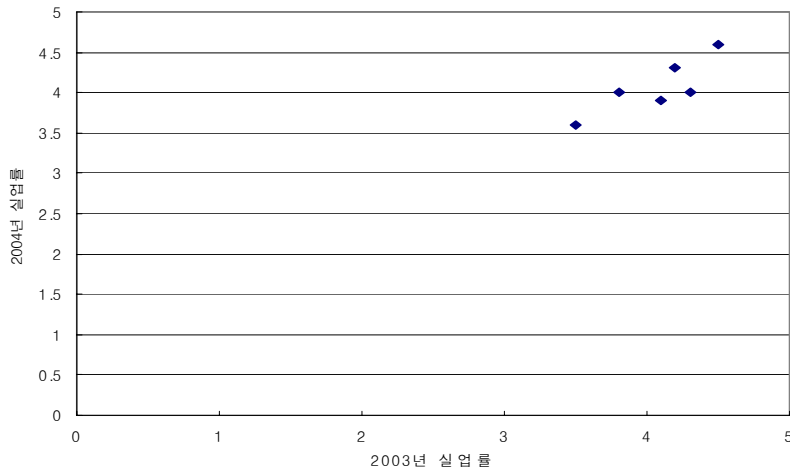
[그림 7] 지역간 실업률 차이의 장기 지속성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10년 정도의 비교적 긴 기간을 두고 보았을 때 실업률의 지역별 차이는 노동자의 이주와 일자리의 창출, 소멸을 통해 사라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실업률의 지역별 차이가 1, 2년 사이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 지역의 2003년 실업률과 2004년 실업률을 점산도로 나타낸 [그림 8]은 실업률이 낮은 지역은 다음 해에도 낮고 높은 지역은 다음 해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지역간 실업률 차이의 단기 지속성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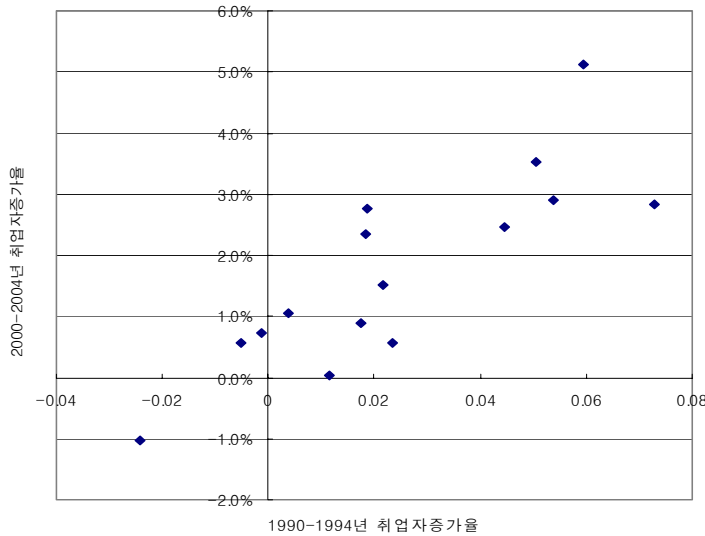
## 2.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 격차의 지속성

실업률의 장기적인 지속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간 성장률의 지속적인 격차는 존재한다.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의 썬벨트 지역의 고용증가와 미시간, 오하이오 등의 러스트벨트 지역의 고용감소는 4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은 관찰된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의 취업자 증가율과 2000년대 초반의 취업자 증가율은 지역별로 지속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도 단위 지역과 광역시 단위 지역으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과 지역별 실업률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는 관측되지 않는다. 취업자 증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업률이 고용창출 요인 이외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노동자의 이주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 지역의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지역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희망 의사를 갖는 구직자가 늘어나서 실업자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자가 늘어나는 요인도 실업자 증가에 기여한다. 취업자의 증가율이 실업자의 증가율보다 클 때만 취업자 증가율과 실업률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 때문에 일자리 창출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고용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림 9] 취업자 증가율의 지역별 격차의 지속성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3. 지역별 고용률 격차의 지속성

최근 고용정책에서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보다 중요한 정책지표로 주목받고 있다.<sup>4)</sup>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제주도가 68%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56%로 가장 낮다. 대도시의 경우 58%, 도 단위 지역의 경우 61%로서 도 단위 지역이 약간 더 높다.

10년 사이 전국의 고용률 평균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고용률의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다. 광역시 단위 지역에서는 대전의 고용률이 10년 사이 비교적 큰

4)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폭으로 상승했으며,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경남, 경북 지역의 고용률이 제고되었다. 이에 비해 부산과 충북, 전북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를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시 단위 지역의 고용률 변동은 지역 취업자 증가율에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비해서, 도 단위 지역의 고용률 변동은 취업자 증가율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도 단위 지역의 고용률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지역별 격차는 비교적 긴 기간 사이에도 유지된다. 이러한 고용률의 지속성은 첫째, 장기적으로 지역의 취업자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동행하고 있으며, 둘째, 쉽게 변하지 않는 지역별 특성이 고용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IV. 지역간 노동이동

지역별 실업률의 차이, 일자리창출의 차이는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을 야기한다. 본 장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고용보험DB 원자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지역간 노동이동을 살펴본다. 그런데 고용보험DB로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서 동시에 지역간 이동을 한 후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 3>은 1년 사이 직장을 옮긴 사람수를 전 직장 소재지와 현 직장 소재지별로 표현한 것이다.<sup>5)</sup> 행은 전 직장 소재지별 사람수이고 열은 현 직장 소재지별 사람수이며 i번째 행, j번째 열의 값은 i번째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가 j번째 지역의 직장으로 옮긴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도 단위에서 지역간 이동을 한 사람의 비중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평균 직장이동자 중 지역이동자는 2.6%에 불과하다.

지역내 직장이동을 한 사람을 제외할 경우 지역간 노동이동을 한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내 직장이동을 제외하는 것은 간단히 <표 3>에서 i번째 행, i번째 열 값을 지우면 된다. i번째 행의 합은 전 직장이 지역 i이면서 직장을 옮기며 지역을 옮긴 사람이 될 것인데 이 값으로 i번째 행의 각 값을 나눈 것은 i번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중에

5) 이 표에서는 2년 이전에 취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1년 전에는 미취업상태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된 후 현재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한 이행확률표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지역이동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서울이다. 비서울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36%이다. 이것은 서울의 인구비율이나 취업자 비중

<표 3> 직장이동자의 지역간 이동(1999~2003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3268742	2496	1468	845	6599	1608	756	36987	1885	1882	2590	1160	1007	1639	1598	351
부산	6057	689159	409	85	356	162	1636	1491	110	142	268	72	219	692	7791	87
대구	3408	450	470592	41	172	148	297	1016	86	117	168	51	39	5872	692	29
광주	2212	70	37	239361	169	136	27	801	41	50	118	340	3270	52	102	21
인천	8592	285	119	120	523134	154	105	8812	260	292	541	182	158	238	246	36
대전	3416	126	114	88	210	271833	50	1099	88	766	1713	177	61	165	140	12
울산	1458	1148	185	26	98	47	198509	433	37	57	106	36	60	877	1023	19
경기	38690	838	579	488	7992	822	389	1693864	1464	1623	2847	751	597	1070	881	119
강원	3487	101	77	49	294	117	84	2067	337044	388	248	88	106	243	135	25
충북	3019	112	105	61	342	925	78	2143	449	284186	1019	126	57	263	180	29
충남	3589	142	107	101	546	1771	120	2999	201	844	344387	404	125	237	213	17
전북	2887	113	45	395	286	311	50	1462	123	171	604	327418	434	91	169	26
전남	2587	245	58	3358	277	124	75	1153	103	90	220	419	323906	143	364	46
경북	3336	665	5647	59	298	199	1111	1624	303	357	341	86	144	554783	881	40
경남	3523	6753	636	95	266	141	1353	1412	149	167	299	113	304	935	634177	66
제주	858	102	19	29	59	31	33	231	24	19	33	23	51	34	69	103583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4> 지역간 직장이동자의 지역 이행확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4.0	2.3	1.3	10.5	2.6	1.2	58.8	3.0	3.0	4.1	1.8	1.6	2.6	2.5	0.6
부산	30.9		2.1	0.4	1.8	0.8	8.4	7.6	0.6	0.7	1.4	0.4	1.1	3.5	39.8	0.4
대구	27.1	3.6		0.3	1.4	1.2	2.4	8.1	0.7	0.9	1.3	0.4	0.3	46.7	5.5	0.2
광주	29.7	0.9	0.5		2.3	1.8	0.4	10.8	0.6	0.7	1.6	4.6	43.9	0.7	1.4	0.3
인천	42.7	1.4	0.6	0.6		0.8	0.5	43.8	1.3	1.4	2.7	0.9	0.8	1.2	1.2	0.2
대전	41.5	1.5	1.4	1.1	2.6		0.6	13.4	1.1	9.3	20.8	2.2	0.7	2.0	1.7	0.1
울산	26.0	20.5	3.3	0.5	1.7	0.8		7.7	0.7	1.0	1.9	0.6	1.1	15.6	18.2	0.3
경기	65.4	1.4	1.0	0.8	13.5	1.4	0.7		2.5	2.7	4.8	1.3	1.0	1.8	1.5	0.2
강원	46.4	1.3	1.0	0.7	3.9	1.6	1.1	27.5		5.2	3.3	1.2	1.4	3.2	1.8	0.3
충북	33.9	1.3	1.2	0.7	3.8	10.4	0.9	24.1	5.0		11.4	1.4	0.6	3.0	2.0	0.3
충남	31.4	1.2	0.9	0.9	4.8	15.5	1.1	26.3	1.8	7.4		3.5	1.1	2.1	1.9	0.1
전북	40.3	1.6	0.6	5.5	4.0	4.3	0.7	20.4	1.7	2.4	8.4		6.1	1.3	2.4	0.4
전남	27.9	2.6	0.6	36.3	3.0	1.3	0.8	12.4	1.1	1.0	2.4	4.5		1.5	3.9	0.5
경북	22.1	4.4	37.4	0.4	2.0	1.3	7.4	10.8	2.0	2.4	2.3	0.6	1.0		5.8	0.3
경남	21.7	41.7	3.9	0.6	1.6	0.9	8.3	8.7	0.9	1.0	1.8	0.7	1.9	5.8		0.4
제주	53.1	6.3	1.2	1.8	3.7	1.9	2.0	14.3	1.5	1.2	2.0	1.4	3.2	2.1	4.3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그리고 채용총량에서 서울지역의 채용총량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비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서울로 많이 이동하는 곳은 경기 지역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 역시 경기 지역이다. 이것은 첫째, 가까운 거리에 접해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둘째, 관측된 지역이동 중 일부는 실제 이주보다는 통근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경북과 대구, 광주와 전남, 인천과 서울·경기 사이의 지역이동 역시 지리적인 근접성에 의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역간 노동이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향후의 과제이지만 이행확률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라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순증가는 일자리창출에서 소멸을 뺀 값이며 동시에 채용량에서 이직량을 뺀 값이다. 지역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t기 채용량 중에서 지역간 노동이동에 의해 채워진 비율이며 이 값은 지역내 일자리창출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래의 식은 고용성과와 지역간 노동이동에 의한 채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sup>6)</sup>

$$JG = JC - JD = H - Q = (H_{out} + H_{in}) - Q$$

그런데 고용보험DB를 통해 측정되는  $H_{out}$ 은 t-1기에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한정되므로 다른 지역에서 고용보험에 포괄되지 않던 취업자나 다른 지역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있으면서 현 지역으로 이주하여 일자리를 가지게 된 사람은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간 노동이동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불완전한 메저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요인이 비슷하다고 하면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는 지역 내에서 채용된 인력 중에서 지역간 이주에 의해 채워진 비율을 보여준다. 지역간 이주가 총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7%이다. 지역간 노동이동 비중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전북, 제주 지역은 매우 낮아서 상위 그룹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역별 순위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간 이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간 이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JG는 지역 일자리 순증가량, JC는 일자리창출량, JD는 일자리소멸량, H는 채용량, Q는 이직량,  $H_{out}$ 은 외부로부터의 채용량,  $H_{in}$ 은 지역 내부로부터의 채용량이다.

〈표 5〉 채용량 대비 지역간 노동이동에 의한 채용비율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인천	3.1	3.2	3.7	3.8	4.7	3.7
경기	2.9	3.0	3.6	4.0	4.6	3.6
충남	2.9	2.7	3.1	3.6	4.6	3.4
대전	2.2	2.5	2.8	3.2	4.2	3.0
광주	2.2	2.6	2.8	3.0	3.8	2.9
울산	2.1	2.7	2.6	3.3	3.7	2.9
전남	2.1	2.2	2.6	3.1	4.0	2.8
충북	2.2	2.1	2.4	2.8	3.7	2.6
경북	2.1	2.2	2.4	2.7	3.5	2.5
강원	1.9	2.0	2.5	2.7	3.5	2.5
경남	1.9	2.0	2.3	2.6	3.2	2.4
대구	2.2	1.9	2.3	2.6	3.0	2.4
서울	2.0	2.1	2.2	2.5	3.0	2.3
부산	1.9	1.8	2.1	2.4	2.8	2.2
전북	1.2	1.3	1.6	1.8	2.3	1.6
제주	0.9	1.0	1.1	1.5	1.8	1.2
전체	2.2	2.3	2.6	2.9	3.5	2.7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 V. 요약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고용보험DB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자리의 순증가 배후에 있는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지역별 일자리창출의 차이가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창업보다는 지속사업체의 고용확대가 일자리창출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흐름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채용흐름과 이직흐름이 지역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고용사정이 좋을수록 채용흐름은 활발하고 이직흐름은 둔화된다. 특히 이직 중 일자리소멸의 비중이 고용사정이 좋을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일수록 자발적인 이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순증가량의 지역적 차이는 보다 긴 기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실업률의 차이는 지속성을 갖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업률의 지역별 차이를 해소한 원인이 노동자의 이동에 의한 것

인지, 아니면 일자리의 지역간 이동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실업률의 지역별 차이가 중장기적으로 해소되는 경로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노동시장 정책이 수립·집행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간 노동이동의 크기는 채용량 전체 흐름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소평가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간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 점은 향후 심도 깊은 분석의 대상이다.

본고의 분석에서 사용된 지역은 16개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구분에 의한 것이다. 박진희(2005)에서 분석된 것처럼 행정단위의 지역과 경제활동권역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은 차이가 있다. 고용성과, 일자리창출과 소멸 흐름, 채용과 이직의 흐름, 지역간 노동이동은 향후 유의미한 지역노동시장의 확장에 기반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원, 「1981~2000년간 한국 광공업 5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노동경제논집』 27(2), 한국노동경제학회, 2004.
- 박진희,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노동리뷰』 통권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반정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 『노동리뷰』 통권 제8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전병유·김혜원, 『디지털경제와 일자리창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전병유, 「지역별 일자리 창출」, 정인수 외, 『지역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정인수·전병유·임상훈, 『지역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Blanchard and Katz, “Regional Evolu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rookings Institute, 1992.
- Bockerman et al., “Explaining Regional Job and Worker Flows”, Working paper, Labo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01.